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의결시

배포 2026. 8. 31.(월) 08:00

국세감면액(감면율) '26년 87.0조원(16.3%), '27년 104.9조원(14.5%) 전망

-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실적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 국세감면액 (A)	761,084	870,132	1,049,307
○ 국세수입총액* (B)	4,021,024	4,447,507	6,153,088
○ 국세감면율 [A/(A+B)]	15.9	16.3	14.5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5.5	16.4	16.6

*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25년은 결산, '26년, '27년은 세입예산 기준)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5년 국세감면액은 76.1조원이며,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 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24년 대비 5.6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하였다.

'26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분야 공제를 상향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 등으로 '25년 대비 10.9조원 증가한 87.0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6.4%)를 0.1%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7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및 R&D·투자지출 증가 등으로 '26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104.9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7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담당 부서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15-4140)
		담당자	사무관	김도경 (dkim7258@korea.kr)

<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억원, %) >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중·저소득자*	336,449 69.0	346,740 67.6	368,582 66.9		
	고소득자	151,136 31.0	166,014 32.4	182,372 33.1		
	계 (총계 대비)	487,585 (64.1)	512,754 (58.9)	550,954 (52.5)		
기업	중소기업	188,301 70.4	203,421 58.1	207,745 42.2		
	중견기업	11,010 4.1	11,213 3.2	12,228 2.5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42,685 16.0	107,762 30.8	245,871 49.9		
	기타기업	25,616 9.6	28,003 8.0	26,397 5.4		
	계 (총계 대비)	267,612 (35.2)	350,399 (40.3)	492,241 (46.9)		
구분곤란		5,887	6,979	6,112		
총계		761,084	870,132	1,049,307		

* 근로소득 8,9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1.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
감면비중은 고소득자 증가 전망

○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

*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 1)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고소득자, 조원): ('25) 5.1 ('26) 5.7 ('27) 6.2

2) 연금보험료 공제(고소득자, 조원): ('25) 1.7 ('26) 2.0 ('27) 2.1

2. 기업: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상출) 모두 지속 증가,
감면비중은 대기업 증가 전망

○ 대기업 비중 증가는 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및 투자·R&D 증가 등에 따라 투자·R&D 공제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

* 투자·R&D세액공제(대기업(상출), 조원): ('25) 3.5 → ('26) 10.0 → ('27) 23.7